

“한반도 평화·안정·번영, 3국 공동 이익·책임”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

“높은 수준 FTA 협상 속도 논의”
10년간 지식재산 협력비전 채택
‘북 비핵화’ 놓고 한일-중 온도차
윤 “한일중, 실질 협력방안 추구”

한일중 정상이 27일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26-27일 청와대에서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한일중 관계의 회복을 다짐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를 약속했다.

의장국인 한국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가 중점 논의됐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

다”고 표현했다.

앞서 리창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3국이 비핵화 등 대북 대응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3국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3국 간 인적 교류, 문화교류 등 각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확대를 촉구하고 북한 비핵화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욱 발전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세 사람은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로, 이를 위해선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

류 4000만명 달성 △미래세대 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환경 조성, 안전한 공급망 구축, 환경·공중보건·초국경범죄 대응 협력 등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의의 모두발언에서도 “3국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 협력방안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과제에도 3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나가기를 희망한다.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세 나라가 글로벌 북합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숙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전남도의회 “영산강 수질 개선 협력”

울산 태화강 비교견학 실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이들 간 영산강 수질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지난해 4월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광주·전남시도의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수질 오염을 극복한 울산 태화강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영산강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견학 1일차엔 울산 철새홍보관을 방문해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철새

들의 낙원으로 변화된 태화강을 살펴보고 영산강 또한 철새들이 찾아드는 생태하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2일차엔 도시 친수공간 조성 우수사례로 꼽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견학하며 수질개선 사례 자료를 수집했다.

조석호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산강 수질개선은 우리 세대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며 “이번 비교견학에서 배운 사례를 바탕으로 영산강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진보당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육아휴직률 ‘최하위’

지난해 광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광주 지방의원단은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육아휴직 초회 수급자 대비 남성 비율은 20.8%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였다.

지난해 전국 평균 남성 육아휴직률은 27.8%였고 충남(37.0%), 경북(33.0%), 울산(32.8%), 대전(31.4%) 등의 순이었다.

광주 5개 자치구별로 보면 광산구 30.1%를 제외하고 서구 18.9%, 북구 16.8%, 동구 14.5%, 남구 13.4%로 20% 이하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저조한 이유는 낮은 소득대체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 좁은 대상자,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 등이 꼽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반면 인천시는 6개월 동안 월 50만원 등 6개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 수영구와 서초구는 지원 기간이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으로 가장 길고,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 광산구는 다음달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진보당 광주 지방의원단은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예산 매칭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에 ‘광주 다음’이 있어야 한다.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시 사용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여야, 21대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채상병 특검법·연금개혁 평행선

여야는 27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등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정실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맞섰다.

회동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안도걸 “尹 정부, 퇴행적 조세정책 대전환해야”

안도걸(사진)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조세정책은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형평성,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등 과세원칙과 배치되는 전형적 부자감세 기조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안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경제실패에 대한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위기 극복을 위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회동 결과를 말하고 있다.

뉴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서 44%까지 양보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안,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아직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된 130여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일 있을 마지막 본회

의에 같이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고준위방폐법” 등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내일 처리가 예정은 되고 있는데 합의가 이뤄져야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추 원내대표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모든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김선숙 기자



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안 당선인은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 중부세 완화, 주식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 부자감세를 해왔고 이것이 간혹재정과 맞물려 역대급 세수결손, 소득분배 악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점으로 나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며 “저출생·지방소멸의 위기 극복과 과세형평성을 제고, 미래 산업을 위한 선순환 복원을 위해 조세·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윤 정부의 퇴행적 조세정책을 바로잡고 특히 세수결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자감세 항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조세 형평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국제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